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바로알기 연속토론회(I)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일 시 | 2016년 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10:00~10:10	○ 등록
10:10~10:25	○ 개회/환영사/인사말씀

■ 사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10:25~10:40	남광규 (고려대 교수)
10:40~10:55	조동근 (명지대 교수)
10:55~11:10	이지수 (명지대 교수)
11:10~11:25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20~11:40	○ 종합토론

【 목 차 】

토론문

■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중단	
남광규 (고려대 교수)	9
■ 개성공단, 순진한 발상과 낙관적 전망이 빚은 최악의 오판	
조동근 (명지대 교수)	15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이지수 (명지대 교수)	25
■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7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토론 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중단

남 광 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1. 개성공단 중단의 불가피성

개성공단은 2004년 한반도평화와 남북 및 민족협력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면 한반도의 반평화세력은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임이 입증되고 있다. 남북협력으로 명명된 사실상의 대북지원은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 시켜주는데 이용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제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은 핵무기 위협 하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결국 이번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반평화, 반민족세력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여실히 증명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자유인’이냐 아니면 북한의 공갈, 위협, 협박에 ‘노예’가 되느냐 하는 기로점에 서게 되었다. 북한은 체제안전이나 대미협상용이 아니라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핵사용으로 위협하면 우리는 군종과 핵전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핵폐기를 실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하나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불가피한 우리 정부의 선택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경제회생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정권의 강화가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 3천 여 북한 근로자들과 20만 개성 주민들의 생계가 끊어짐으로써 북한 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북북갈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개성 시민은 북한 내 중상위층으로 다른 지역의 북한 주민들도 부러워하는 계층이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김정은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경제난을 겪으면서 핵과 미사일에 돈을 쏟는다는 건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집권층 반감이 생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2,000년대 이후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에 소요한 37억 달러의 개발비 중 개성공단이 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달러가 정확히 핵개발에 들어갔다고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로 되돌아 온 것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이끄는 제2경제위원회가 개발 주도하는데 관련 인사들과 단체, 기업들이 현재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제2경

제위원회는 김정일의 비자금과 무기 밀매를 담당하는 39호실을 관할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도 장거리미사일 발사 한번에 2~3억 달러가 든다고 말한바 있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1년 치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규모다.

대외적 측면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동북아를 신냉전 구도로 대립과 갈등을 조성하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나쁜 상황이 아니다. 현재 한미일 3각공조가 굳건하게 회복되는 계기가 북한에 의해 마련되었고 반면에 북중관계는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다. 러시아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립 서비스 차원의 협조만 말할 뿐 실익이 없는 동북아문제에 비용을 지출하려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동북아정세는 중국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어 안보상의 취약을 느끼게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입장으로 몰아온 북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허울뿐인 혈맹국으로 북한을 계속 안고 국제사회와 맞설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중국의 취약점이 높아지는 것을 각오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의 목적

북한은 과거 냉전기 미소대결처럼, 특히 군사력 경쟁의 핵 경쟁에서 스스로를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주체사상의 신념체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 동유럽에 미국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한국에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은 결국 미국에게는 항복문서를 받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노예문서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과의 핵 경쟁에서 정공법으로 나가 핵 우위를 추구했다. 서독에 퍼싱Ⅱ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소련을 압박하여 냉전에서 승리하는 군사적 요인이 되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2012년 4월 동창리 발사장을 외신기자들에게 공개했을 당시 북한 핵개발의 인사 중 하나인 김철주사범대 정기풍 교수는 취재 기자들에게 무심결에 당시 쓸 로켓에 군사적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당시 정기풍은 “어차피 우리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우주정복기술이 군사 분야에 쓰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강요된다면 쓰일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라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발달한 핵능력 및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5차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체제결속과 자신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김정은의 통치행태를 보면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으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권력을 강화시켰던 김정일의 통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1년 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을 미사일 발사에 허비하는 등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에 투입한 돈만 해도 약 8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는 김정은이 집권 5년이 되는 해로 북한이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다. 이미 작년부터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상화하는 내용들이 북한 내 소학교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유일지도노선을 각인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업적을 물려받아서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독자적인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전보다 북한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대를 능가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만의 업적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최대 국가적 성과로 스스로 주장하는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핵무기개발과장거리 미상일 개발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이상의 선전거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던 북중관계를 다시 어렵게 하더라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내적 권력기반을 드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4차 핵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 것은 과거부터 변함없이 해왔던 북한의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다. 그런 점에서 4차 핵실험은 대외적으로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당돌한 도발의 성격이 내재해 있다. 북중관계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남북관계는 김정은의 위신을 높이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사안밖에 되지 않다. 현재로서는 북중관계의 골이 지금보다 더 깊어져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에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고 올 남북관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김정은 스스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상반되는 대외적 행보다. 북한은 지금처럼 각종 속도전 형식을 통한 내부 노동력 동원으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인가 하는 점을 북한 당국은 곧 알게 될 것이다.

3.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도움

북한의 4차 핵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앞서 개성공단 중단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 유엔을 중심한 국제사회에서는 보다 효율성 있는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추가제재 외에 개별 국가들의 제재를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미국은 가장 포괄적이고 강경한 대북제재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정부, 은행의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상하원이 행정부에 부여해 오마가 이를 승인했다. 내용에서 미국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사이버범죄 행위 등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제재도 포함했다. 이번 미 상하원의 대북제재안은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2013년 3차 핵실험 때부터 유엔제재에 참여한 중국도 유엔의 추가제재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중국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강행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그

러나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게 취할 수 있는 제재들도 있는데 예로, 현재 중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식당이나 노동자들의 취업 금지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를 제한시킬 수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원유 중단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중국 정부도 중국 내 대북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월 7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을 보면 중국 네티즌의 66%가 미국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을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일본도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와 대북송금 제한 확대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핵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에서 수동적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점이 개성공단 중단 요인의 하나다.

4. 우리의 대응

향후 북한이 각종 대남 및 국지도발을 강행하거나 국제테러단체와 연계 가능성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위기로 연결되는데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경우 뉴욕이나 워싱턴을 공격하겠다고 북한은 미국에게 협박하고 미국 국민들은 한국 지원 여부를 고민할 것이다.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한핵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의 대응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이미 감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체 핵억지 능력 확보도 제기될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 자체의 핵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우선을 그것을 제외한 다른 수단들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싸드 배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싸드는 그동안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해서 배 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중국을 자극해서 미중관계와 한중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싸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해 왔던 중국의 주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드 배치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북한이 만들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공격의 징후가 드러날 경우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 을 위한 '킬 체인' 역량을 서둘러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PAC-3 요격미사일을 추가 확보하여 도시마다 배치하고, 이를 사드와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는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B-52를 비롯해 강력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출동시켜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 사실상 북한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한미일 3각 공조도 강화시켜 대북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 국제사회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북한핵을 불용하고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북한의 핵의도를 무산시키는 올바른 방향의 대응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결산해서 정리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에 국민세금으로 처리될 사후 대책에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20여국에 나간 북한 근로자들이 노예노동을 해서 한해 벌어들이는 임금도 북한 핵개발의 주요 자금줄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유엔에서 인권에 반하는 착취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를 통해 개선을 권고한 상태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조해 이 돈줄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들과 순수한 젊은이들을 혼혹하기 위해 입만 열면 평화와 민족을 말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핵위협을 통한 ‘공포의 평화’이며 그들이 말하는 민족은 남한을 핵 인질로 삼아 남북한 주민들을 노예는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잘 모르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성취물들이 오히려 북한의 반평화적, 반민족적인 목적의 서식처가 될 수 있다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선전, 선동을 일삼으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토론 ②]

개성공단, 순진한 발상과 낙관적 전망이 빚은 최악의 오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적합한 조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민족, 자주, 평화통일이라는 주술(呪術)에 침해된 국익(國益)

앞을 내다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반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탈무드 지혜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다. “한번 속으면 속인 상대방이 잘못이지만 같은 사람한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다.” ‘자기교정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만큼 이상하리만큼 자기교정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20년을 속아왔지만 지금도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하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우리사회에 친북세력의 뿌리가 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은 우리가 북한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6자 회담’ 등을 통해 대화를 하고 ‘개성공단’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증진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순진한(innocent) 발상에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더해진 최악의 오판이었다. ‘햇빛정책’이 그 절정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서 단 한 순간도 핵 무장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은 ‘핵 무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고 이는 밖으로 천명했다.¹⁾ 이 같은 당연진실을 우리는 묵과했다. 아니면 애써 외면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북핵 개발을 목도하면서도 우리는 대화에 매달렸다. 대화는 ‘대북 지원’의 또 다른 얼굴이다. 북한은 한국의 대화와 지원을 ‘역(逆)이용’해 핵무장에 성공했다.

<표-1>은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지원 액은 69억 5,950억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이다. 현금이 29억 222만 달러, 현물이 40억 5,728 억 달러이다. 현금과 현물의 비중이 ‘3:4’이다.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물과 달리 현금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 현금지원은 사용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돈의 일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총 부리를 겨누게 했을 수

1)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공유된 정보’(common knowledge)이다. “내가 알고, 네가 알고, 네가 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네가 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사실을 네가 알 때”, 공유된 정보라 한다.

도 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자승자박적인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는가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북한 펴주기는 좌파세력 집권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민족·자주·평화통일론’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국민은 혼을 잊었고 사회는 ‘집단최면’ 상태에 빠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을 통해 ‘분단을 넘어 통일로’라는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 펴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김대중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하고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희대의 세습·방탕군주인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적국지도자를 미화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임의대로 그은 선이다”라면서 NLL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는 “남북관계 하나만 잘 되면 모든 게 깨판나도 괜찮다”는 비속어까지 동원하면서 북한을 펴주었다.²⁾ 그는 “북한의 핵개발은 일리가 있다”라고도 했다. 국가원수로서의 금도를 넘은 것이다. 사회 분위기도 한쪽으로 경도되었다. 일각(一角)이긴 하지만 북한 핵에 대해,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는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는 비이성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기까지 했다.

<표-1>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 금액



동·서독간의 경제협력(지원)은 어땠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독은 동독에 경제적 지원을 할 때,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했다. 현금이 지원되는 경우, 무기 등 전략물자 구입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지원은 동독에 갇혀있는 정치범 등 사상범의 인권 개선으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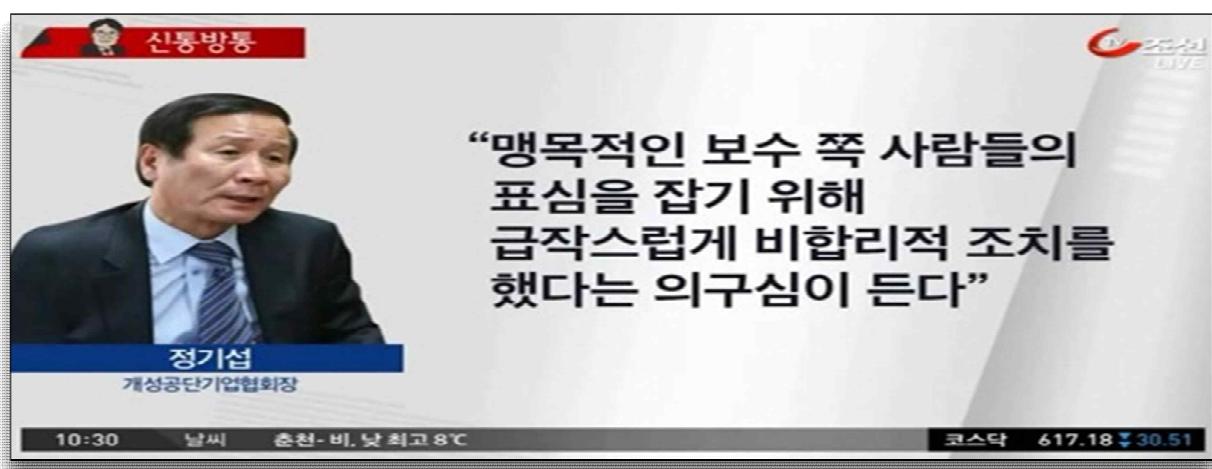
2)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일방적 펴주기식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그들은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대북 식량과 원자재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면피용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은 차관 상황에 대해 관심도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북한 정권은 “북핵은 민족공동의 보검”이라고 주장하며 “핵 보유로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는 대남선전을 하고 있다. 차관계약은 결과적으로 펴주기를 ‘정당화’시킨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용도를 제한했다. 또한 서독은 동독이 자국의 투자자 자산을 임의대로 동결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 예컨대 서독은 경제협력을 하더라도, 동독이 아닌 서독 영내에 공장을 지었다. 그런 관점에서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개성이 아닌 DMZ 구역에 공단을 조성하고, 남측에 공장을 북측에 북한노동자의 숙소를 지었다면 자산동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칼자루를 북측에 줌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만 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2. 여전히 교정되지 않는 북한을 보는 눈: 개성공단 중단 비판에 대한 반(反)비판

야권은 일사분란하게 개성공단 중단을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전(前) 대표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남북 간의 합의고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³⁾

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지속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남북 간의 합의고 약속이다”로 집약된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남북 간 합의와 약속이 지켜질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파기 원인을 제공한 만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당연한 ‘자위조치’이다. 북한을 제제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효적 전략’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필요한 조치를 적기(適期)에 취해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길이다. 문재인의 의식 시계(時計)는 과거 참여정부에 고정되어 있다. 그의 인식세계에 비춰볼 때 그는 미래의 지도자로 적합지 않다.



<그림-1>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정기섭 발언

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254048&intype=1>

야권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점차 반대논리가 '진영논리'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권은희의원(국민의 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체를 안보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마저 듣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⁴⁾ 그녀는 2가지의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녀에게 아직도 안보이슈로 선거를 치르는가를 묻고 싶다. 안보이슈가 '선거 호재'인 시절은 이미 지났다. 그리고 꼼수는 '얕은 수'로 일을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꼼수가 되려면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앞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도록 무엇인가를 획책했어야 한다. 그들은 '예정된 길'을 가는 중이다. 꼼수 운운은 논리부재 상황에서 자신에게 던지는 독백이 아닐 수 없다.⁵⁾ 권은희가 꼼수를 부린 것이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기섭의 발언도 진영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오버(over)한 것이다. 만약 김정은의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선거와 떨어진 시점이었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을 가, 궁금해진다.

민주사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만큼 자기교정이 불가능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20년을 속았다면 이제는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판하는 정치세력에게, "그렇게 펴주고도 앞으로 더 펴주겠다"는 것인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 개성공단 입주기업 진상 및 피해보상 위원회: '세월호'의 재현인가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기섭은 12일 "더민주, 국민의 당 및 정의당" 야권 3당을 긴급 면담하고 '개성공단 중단 관련 보상 및 피해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국회가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야권 3당은 "진상조사위·특별법 제정·범정부대책기구"를 추진할 뜻을 비쳤다.⁶⁾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인 입장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날벼락일 수 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상 조사위, 특별법 제정 및 범정부대책기구 구성"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세월호를 획책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진상·피해조사 위원회'는 당연해 보이지만 천착하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위원회를 꾸리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개성공단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개성공단이라는 도관을 통해 북한 체제에 얼마만큼의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4) <http://news.donga.com/List/3/00/20160211/76396818/1>

그녀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 "한반도의 불안 정서를 극대화하고,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불안정서 극대화 운운은 문재인과 판박이 사고가 아닐 수 없다.

5)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녀의 발언은 그녀의 의식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6) <http://m.news.naver.com/read.nhn?oid=079&aid=0002798310&sid1=100&mode=LSD>

남북 경협이라는 명분하에 입주업체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 지원받은 경협자금 등이 소정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 됐는지, 그동안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를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피해 규모’를 산정하게하고 피해액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통해 보상할 것이 있으면 합리적 기준에 의거 보상해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의 적법성 여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2항”을 원용하면 된다. 제 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박주선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현재 개성공단에 자리 잡은 사업체는 총 123개이다. <표-2>는 2005년도에 입주한 사업체의 사업체명과 주요 생산제품을 정리한 것이다. <표-3>은 개성공단에 입주(진입)한 사업체 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2005년을 시점(始點)으로 2006년 12개 업체, 2007년 35개 업체, 2008~2009년 52개 업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개와 2개 업체가 입주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생산한 주요 제품은 “섬유, 봉제, 신발, 전자, 전기, 주방 경공업제품” 등 노동집약적 재화가 주종을 이룬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표-2> 2005년 입주업체 현황, 회사명 및 주요생산제품

연번	회사명	입주 시기	주요 생산제품
1	로만손	2005년	시계, 쥬얼리 제조업
2	아라모드시계		손목시계 제조업
3	신한국정밀		손목시계 제조업
4	대풍시계밴드		손목시계 제조업
5	픽시스		보석, 시계용케이스 제조업
6	현진정밀공업사		손목시계 제조업
7	로잔시계		손목시계 제조업
8	엔골드아트		큐빅세팅 가공업
9	동일정공사		손목시계 제조업
10	삼덕통상		신발, 신발부품 제조업
11	태성산업		화장품용기 제조업
12	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제조업
13	문창기업		봉제의류 제조업
14	에스제이테크		전자기기 제조업
15	부천공업		전자부품제조업
16	재영솔루텍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	신원		봉제의류제조업
18	소노코쿠진웨어		주방기기 제조업

자료: 박주선의원실

7) ③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할 수 있다.

<표-3> 개성공단 년도별 입주 사업체 수 추이

년도	사업체수	년도	사업체수
2005년	18	2008~2009년	52
2006년	12	2010년	4
2007년	35	2011년	2
총계	123개		

자료: 박주선의원실

<표-4>는 2006년 통일부 제출 국회감사 자료이다. 통일부는 남북경협기금 대출기업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기업명을 빼고 제출했다. <표-4>에 기재된 자산규모는 본사 자산규모가 아니라 본사가 출자한 개성공단 내 사업체 자산이다.⁸⁾ 따라서 자산은 설비기계와 원자재가 전부이다. 공단건설과 전력공급 등 인프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했기 때문이다. 경협기금대출은 해당 사업체의 자산에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때 경협자금은 낮은 금리에 장기간에 걸친 ‘거치 및 분할 상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협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유리하다. 따라서 경협자금을 더 많이 대출 받으려 자산규모를 부풀려 통일부에 신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사이름을 ‘공란’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의심을 하려해서가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실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표-4> 2006년 통일부 제출 국회감사자료

회사명	자산규모 (억원)	남북협력기금 대출 (억원)
00기업	75	45
00기업	112	49.5
00기업	43	40
00기업	20	27
00기업	150	45
00기업	53	43.3
00기업	55	44
00기업	54	30
00기업	40	24.5
00기업	78	30
00기업	55	40
00기업	20	29
00기업	50	25
00기업	27	16.5
00기업	130	-
계	962	488.8

* 입주기업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8)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사업장개념의 출자회사다.

추가적인 의문점이 제기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재화는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가하는 점이다. ‘보세구역’처럼 100%수출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상당정도 “내수로 흘러 들어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싼 인건비로 생산한 제품을 국내(내수)에 비싸게 팔아 ‘비정상적인 이윤’을 얻어왔다는 것이 된다. 뒤집어 보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로 인해 국내의 많은 영세업체들이 죽어나갔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의구심이 해소돼야 한다.

입주업체협의회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모든 것을 북쪽에 놓고 빈손으로 내려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랬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협력에서는 투자협정서 등을 통해 자산몰수 내지 동결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남북 협력도 국가 간의 협력은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 따라서 2003년 개성공단 남북 합의 때, 개성공단 중단 시 투자자산의 귀속, 즉 투자자산 보장에 관한 합의문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사지(死地)로 몰은 것과 다름없다. 설령 북한과 완벽한 투자보호 합의문을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북한이 이를 폐기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결국은 돈을 댄 사람이 작업장을 상대편 진영에 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투자자의 자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지 않았고 못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배임’을 저지른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자산몰수 내지 동결에 대비해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 중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6곳이다. 공단이 문을 닫으면 보험에 든 회사는 피해 금액의 90%까지(최대 70억원)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48개사는 ‘경협보험’을 들지 않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⁹⁾ 보험금 지급에 최소 3개월이 걸리고 영세업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경협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변(辨)이다. 그럼에도 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고 사고를 낸 뒤, 국가 더러 사고를 책임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표-5>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보험 가입현황

보험가입자	124개 입주업체 중 76개
보험료율	0.4~0.5%
보험대상	시설투자금
보험금 지급 규모	2850억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입주업체는 ‘까다로운 지급 절차’를 문제 삼는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공장 가동이 1개월 이상 멈췄을 때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시작되고, 이후 재무제표 검증, 피해액 산정 등에 최소 3개월

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250811&intype=1>

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체 입장에선 보험금이 나오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경협보험은 정치적인 이유 등의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보험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보험 미가입의 방어논리가 될 수 없다.

보험료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료는 투자액의 0.4~0.5% 정도다.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5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영세업체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매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내지 않는 그리고 부담이 되지 않는” 보험료는 없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시설투자금만 보험대상’이어서 영업 손실 등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 손실을 보험으로 해지 (hedge)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기업가가 아니다.

우방이든 적국이든, 경제교류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들이 하는 것이다. 모두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립된 예측불허의 국가로 낙인찍힌 지 오래이다. 따라서 북한의 돌출적인 행위로 인한 자산몰수의 개연성에 대해 개인도 나름의 자구책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경협보험’인 것이다. 개성공단 리스크는 입주기업의 생산시설이 북의 군사적 불모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124개 기업 중 48개 기업이나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개성공단이 가진 ‘리스크’에 눈을 감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면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을 ‘땅 짚고 혜엄치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

4. 에필로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옳은 결정이다. 북한이 그동안 수 없이 도발을 해도 개성공단이 유지되니, 개성공단은 오히려 한국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착각 했을 수도 있다. 개성공단은 그 실상이 가려지면서 기득권화됐고 그만큼 타성화 됐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북핵 제재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북한 같은 원초적 독재·폭력 국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수밖에 없다. 대화창구로서의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평화는 대화가 아닌 힘의 압도적 우위에서 나온다. 이는 인류 역사의 염중한 사실이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만큼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누구든 이 같은 피해를 지렛대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세월호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진상조사위·특별법 제정·범정부대책기구” 추진은 결코 추동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진영논리를 등에 업고 정치적 소득을 얻으려 한다면, 이 역시 염중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협보험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론 남북협력기

금 등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실상도 공개돼야한다. 공식 집계된 것만 정부와 민간에서 1조19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베일에 쌓여있다. 진출 기업들의 수익성은 어땠는지,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북한 정권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 국민은 아직도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국민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제 밝힐 것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입주기업들의 생산·판매는 물론이고, 급여와 부대비용 등 대북 지출의 회사별 실태를 명확하게 공지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이미 국제정치적으로 생점화 되었다. 미국 하원은, 북한을 정조준 첫 대북제재법안을 2월 13일 처리 했다.¹⁰⁾ 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상원 통과(2월10일) 이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처리 절차'(suspension of rules)에 따라 동 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대북제재 법안은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¹¹⁾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재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행정부가 대북제재에 계속 미온적이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등을 직접 타깃하는 입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개성공단은 순진한(innocent) 발상에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더해진 최악의 오판이었다.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한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최소한의 적절한 자위조치이다. 진영논리에 기초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세력은 필패할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는 엄정한 기준에 의거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개성공단 운영의 실상도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1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3/0200000000AKR20160213001851071.HTML>

11) 대북제재의 내용은 역대 최강이자 가장 포괄적이다.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제재를 비롯한 북한 정권의 지도층 문제 ▲인권 문제 ▲자금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사이버 안보 등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망라된 거의 모든 대북제재를 포괄하고 있다.

[토론 ③]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개혁개방의 시험대가 아니라, 개혁개방 물결의 방파제로 인식하였다.

근거 1. “김정일 이어 김정은도 ‘모기장 개방론’, 경향신문 (14. 2. 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62143425&code=910303

근거 2. 금강산관광사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합작사업 직영 의욕 전무
(기술, 경영 전수 의욕 없이 인적 접촉의 최소화만 집착)

근거 3. 소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틀 안에서 유지됨.

상대적으로 “럭셔리”한 직장이란 점이 차별성,
(구내식당, 노동환경, 구내 매점, 물건 빼돌리기)
개성공단 노동자는 국가로부터 의식주 배급,
노동의 결과물 (임금)은 국가가 가져감.

근거 4. 조총련계 기업인들의 외면

1984년 대외 채무불이행선언 계기로 합영법 (공동투자경영)

1992년 합작법 (공동투자, 북한 독자경영)의 실패

2. 개성공단의 (북한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통제기반 체제의 이완

- 통제 중독 체제에 외부 (남한) 상품과 스토리가 전파됨.

3. 중단의 의의

한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사실상 노동 착취) 동참을 청산함.

- 북한인민의 입장에선, 개혁 개방 물결의 방파제가 제거된 셈.
(개성공단 노동자들과 한국 기업들의 단기적 손실)

4. 중단 결과 예상

다양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인류보편의 가치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부응하는 입장과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단기적으로는 통제 중심 체제가 강화되어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으로서도 통제 중심체제가 청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핵문제, 통일, 대한민국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

5. 김정은은 과연 김정은은 과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장할까? 필자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명쾌한 답을 정명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실존철학적 접근,” 『통일전략』 12권 2호 ,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4. pp.225–252. 는 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김정은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오히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필자로서도 이외의 답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²⁾

12) 졸고, 김정은은 과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장할까? 통일전략, 제13권 제1호(2013 . 1 . 30) 217쪽

[토론④]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박 인 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개성공단 사업의 경과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2003년 착공, 2004년 제품생산)은 당시 정부의 햅볕정책(대북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햅볕정책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강경책만으로는 북한의 변화,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남북 간의 상호 대화, 협력, 교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를 끌어내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자유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장점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비록 우리가 일방적인 펴주기를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북한이 그 은혜를 무참하게 저버리지는 않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심리, 나아가서 당시 논란이 되던 북한의 핵개발 등 안보 위협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있었음.

그러나 현재 폐쇄된 상태인 금강산관광 사업(1998년~2008년)과 함께 그 동안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현실은 그 10여년의 기간 동안 북한은 철저히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여 최근 4차 핵실험 즉 가장 위력이 있다는 수소폭탄의 개발과 함께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개발까지 진전한 상태임.

또한 최근까지 약 3만명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 탈북자와 그들의 증언에 나타나는 것처럼 금강산 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을 통하여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거나 자유시장경제 교육의 성과가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찾기 어려움. 북한 주민들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사업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이나 다른 개인적 정보를 통하여 북한체제의 모순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 현실임.

2. 따라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책은, 일부 정치인의 주장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시기가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으로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봄.

3. 개성공단 폐쇄과정을 보더라도, 지난 10일 우리 정부의 발표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전면 중단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를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귀환 등 사업 중단에 따른 협력을 요구하면서 2013년 북한에 의하여 촉발된 개성공단의 일시 중단사태 당시와 같이, 당국 간 후속 협의를 기대하였음.

그러나 북한은 협력은커녕 바로 다음날 오후 공단 내 우리 시설과 물자 등을 전면 동결하고, 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체 직원에 대하여 철수를 위한 시간을 전혀 배려하기 않고 당일 날 바로 전원 추방하였으며, 또한 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심지어 남북 간 군 통신선과 판문점 적십자 채널 등 남북의 연락망조차 전면적으로 단절시킴.

이는 국제규범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행위이며, 그들이 평소 남북 간 진정한 대화와 협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증좌로서 ‘개성공단의 폐쇄’는 바로 북한의 책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 사회단체에서 마치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잘못임.(개성공단 폐쇄의 주체는 북한임)

4.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효과에 대하여 미리부터 우려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중단의 효과는 ‘비정상에서 정상 상태로의 복귀’이므로 그 효과를 미리 우려한다거나 이를 논할 필요조차 없음.

더구나 일부의 주장처럼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수익이 북한정권의 유지나 핵개발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공단 근로자 등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간다고 전제를 하면, 개성공단을 통한 생계수단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수 만명 내지 수십만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의 생활과 지역 경제에는 적지 않는 타격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 북한 정권에도 부담을 주게 되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효과는 적지가 않음.

그렇지 않고 우리 정부의 발표처럼 그 자금이 대부분 북한정권의 유지나 핵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면 더욱 더 개성공단 사업이 무조건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않을 것임.(개성공단 중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언제나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조커 카드’임)

따라서 우리가 이 시점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효과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정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한마디로 웃기는 코메디라고 할 것임.

5. 개성공단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아 사업을 하던 기업주 등 우리 측 피해에 대하여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우리 측 피해는, 개성공단의 관리요원인 기업체 인원은 소수이고,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북한의 근로자가 약 54,700여명으로 압도적인 형편임.

우리 측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124개 업체)는 그 동안 한국에 비하여 극단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특혜적인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이번과 같은 남북 간의 안보상황에 따른 돌발 변수는 과거 금강산관광의 중단과 자산몰수 등으로 현대아산이 재정위기에 처한 경험이나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및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로 인한 개성공단의 일시 중단 사태 등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임.(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따라서 마치 우리 정부가 가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이나 국민세금에 의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 할 것임.

6. 대북 강경책과 온건책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이 강경책과 함께, 또는 오히려 대화와 협상 등 온건책이 병행되거나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제정치나 외교무대에서 강경책과 온건책이란 큰 틀에서는 결국 정세의 국면에 따라 그때그때 선택되는 것이며, 언제나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그러한 측면에서 현 단계에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온건책을 배제하는 강경책이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세에 부응하는 태도의 변화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일관성 있는 강경책'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음.

또한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은 강경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른다'고 선불리 오도하면서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대표)도 있으나, 진정한 승리와 평화는 전쟁을 두려워하는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쟁을 각오하고 항상 준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서 얻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死則生, 生則死)

7.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한 남북한 간의 현 상황에서는 경제문제보다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국가 안보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인식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기보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의 태도는 극히 잘못된 것임.(심지어 정병국 의원과 같은 여당의 중진 정치인들조차 이번과 같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박대통령의 통일대박은 실패했다'는 식으로 비논리적인 언행을 하고 있음.)

또한 이번 사태를 광우병 사태나 세월호 사건처럼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북측이 의도하는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으로 이끄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2층(정동, 카리스타워)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